

다이나믹! 주민자치 광주·전남 들여다 보니

단순 '민원 제기'서 '주권 찾기'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정책 결정에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데 그쳤던 지역주민들이 성숙한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주민감사청구제나 주민투표법 등 법·제도를 활용, 지방자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과거 지자체의 '요식행위'로만 여겨졌던 공청회, 설명회 등에도 열성적으로 참가해 정책·사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민 참여가 질적·양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들도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해 시민과의 대화, 현장 탐방, 사전 공청회·설명회·간담회 등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다양해지는 주민참여제도=광주시나 전남도 등이 상위법과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시민참여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시민참여기본조례, 시민참여예산조례 등이다. 일정 기준을 정해 주요정책에 대해 토론회나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예산안 작성에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개정됐

공청·설명회 등 적극 참여 정책 결정에 영향 주민발의로 강진 공설추모공원 철회 성과 중앙정부 권한·예산 제한은 '참여 자치' 한계

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도 가능하다.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도 지금까지 그 사례는 미미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은 주민감사청구다.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상위기관에 그 잘못을 가려달라는 것이 그 취지로, 광주지역의 경우 동구·북구는 100명, 나머지 자치구는 200명 이상 성인의 서명이 있으면 광주시에 각 자치구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행정정보공개청구 등이 있으며 광주시가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나 사전 공청회 등도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이다.

▷지자체 대책 마련 부심=민선 5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에 대한 지자체 대책도 다양해지고 있다. 미흡하

지만 지자체 업무의 핵심인 예산이나 감사의 영역까지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의 마련, 시민의식의 성숙 등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과거 지자체 조례가 정한 청구인 서명을 갖추지 못하거나 관련 법·제도의 이해 부족, 지자체의 거부 등으로 무산된 바 있었던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투표 등이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일부는 지자체의 결정을 철회시키는 위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광주시 북구청의 건축허가를 내준 북구 매곡동 이마트의 건축허가 취소, 최근 주민투표 발의에 의한 강진군의 공설추모공원 사업 철회 등이 대표적이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광주시는 민선 5기 들어 시민과의 대화, 사업·정책 결정 사전 공청회, 현장 탐방 등을, 전남도 및 시군 역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주민 사전 설명회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주민들이 감사청구나 투표 등에 나서기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하겠다는 취지다.

▷주민참여 한계와 대책='2할 자치' '3할 자치'의 한계로 지자체의 권한·예산 등은 제한되고 있고, 이는 주민참여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에 비해 주민들의 참여의식은 여전히 미흡하고 '막무가내식' 민원 제기도 여전히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에 소극적인 주민들을 위한 야간 및 휴일 공청회, 의견 수렴 후 반영 정도 공개, 계층·연령 등을 감안한 섬세한 의견 수렴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전에 주민투표나 주민발의까지 가는 것을 예방하는 행동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재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무책임한 정치적인 도구화, 행정 및 재정적인 낭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늘어나는 주민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갖은 이주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이 상당부분 파괴되고 주민자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오래 살도록 하는 주택정책과 정주여건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강 승촌보 수문 개방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11일 광주시 남구 영산강살리기 6공구 승촌보에서 4개의 수문을 개방하는 '승촌보 수문 개방 시운전' 행사를 했다. 승촌보는 9700만톤의 물을 담수할 수 있으며, 수문을 열면 초당 2644t의 물을 방류할 수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오는 31일에는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의 감문을 개방해 황포돛배를 운행하는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과학벨트 추진일정 늦춰지나

내년 예산 절반 깎여... 광주 등 25개 연구단 하반기 운영비만 반영

5조20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사업이 입지 선정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년 과학벨트 관련 예산도 부처 요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깎이는 등 애초 일정을 무리하게 잡았다가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발표한 '과학벨트 조성 추진 일정'에 따르면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원장 선임과 함께 2011년 하반기에 문을 열고 내

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산하 연구단 선정 작업에 들어가 1년 동안 광주 5개 등 25개 연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었다.

또 이 같은 일정을 근거로 32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절반인 1600억원만 인정했다. 교과부 일정과 달리 25개 연구단의 내년 하반기 운영비만을 반영한 결과다.

김도연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교과부가 요구한 예산은 내년 25개 연구

단도 동시에 출범해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분들을 모셔 25개 연구단을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실제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암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예산 축소 등이 아니라 국가 대개입 만큼 일정 자체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 같은 일정과는 별도로 추가연구단 배정,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에 전력해 기울일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전남 내년 예산 편성 주민의견수렴

인터넷·서면·설명회 등 통해 반영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인터넷과 서면,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의견 수렴은 도정홍보지인 '전남 새뜸'을 활용한 설문조사와 인터넷 홈페이지 네티즌 설문조사, 도의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지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설문조사는 오는 30일까지로 16일 오후 4시 도청 왕인실에서 도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설명하고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한다.

또 도 홈페이지에 '2012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란 코너를 신설하고 30일까지 3주간 인터넷으로도 재정운영 방향과 부족한 재원 마련 방안, 사업에 산성 시 가장 역점을 뒀야 할 사항, 과제별 투자 확대 사업, 도 재정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 등 16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전남도는 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웃기만 평

-김종두



웃기는 발상 '국민이 붐이나?'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지지부진

목포·보성·진도 등 지자체 예산 준비 미흡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2010년 신규 재정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목포시·보성군·진도군이 지난해 추진했던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비봉공룡공원 조성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액 32억원 중 45.8%인 14억6700만원만 집행돼 사업 추진이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진도군의 경우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국비 10억원과 지방비 10억원을 확보하고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시는 또 올해 이충무공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 확보해야 할 지방비(10억원)를 여지껏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진척률도 15%에 머물고 있다. 목포시는 9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확보가 늦어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재정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감을 저하시킬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 제주 골프투어 사은행사. 이젠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수 있는 골프 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8월 28일(일) ~ 8월 29일(월) 1박2일 ★45홀 패키지 ₩369,000. 8월 29일 ~ 10월 28일 까지 주중 1박2일 ★36홀. 1. 해비치 리조트 32평(4인1실) 36홀. 2.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홀. 3. 네이버후드 호텔 (2인1실) 36홀.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최우수 판매대리점 예약센터 (주)투어클럽 & 스피드골프투어 ☎ 062)382-8201, 010-3613-7810